

추경호 “여야, 민생법 합의 처리하자”

국힘,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우선순위 정해 8월국회내 처리 제안 민주당 “민생 사안 논의 의향 있어 거부권 정국은 여당이 풀어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금의 불통 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린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고 부디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화물표준운임 제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중 정쟁의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 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 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리당락에 집착한 무리한 청문회와 정쟁 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 여·야·정 협의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혜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금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이다.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

했다.

또 “사실 폭염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초래된 불통 정국 속에 논의가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다. 국정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인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여파로 무더위 속 단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3천명 통신조회…박정희도 혀 내두를 정권”

민주·조국혁신당, 검찰의 언론·정치인 전방위 사찰 반발

야권은 5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은 계속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계속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70명 통신 조회를 한 공수처에 대해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000명 통신을 조회한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천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이 주기조작과 명목백 사건에서 김건희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만 골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 강압 이상의 범죄조직인지 아니면 김건희 부부의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혁신당, 잇단 ‘호남 인재’ 중용

지명직 최고위원 조윤정·당대표 비서실장 장성훈

조국혁신당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윤정(사)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과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에 서희원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호남 출신을 중용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 지역구와 지방선거 출마를 공언한 조국혁신당이 호남 인재를 모으면서 오는 10월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부터 후보를 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한 뒤 오후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윤정 최고위원은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졸업 한 뒤 같은 곳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광주시에서 여성·가족·교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여성비전네트워크 이사장을 지내며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

다.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서희원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순천만 보전운동, 여순사건 공개조사 등 전남 시민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초대 운영위원장, (사)책과 도서관문화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도서관 확산에 참여해왔다.

장성훈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호남 출신이다. 장 비서실장은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조국혁신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정경험을 보유했다. 또 실무경험에서 환골고신 전문회사의 임원을 맡아 정책 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권,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국힘, 반발해 표결 불참...“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

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정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정외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전대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

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